
		보 도 자 료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 	
		배포일자	2021년 4월 1일(수) 총 3매		
담당 부서	감사관실	담당자	• 청렴윤리팀장 임미선 ☎440-3181 • 담당자 송종현 ☎440-3183		
사진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 및 인천광역시청렴사회민관협의회,
국회에 ‘이해충돌방지법’ 입법 촉구 공동 결의안 채택**
 - 청렴사회민관협의회 3월 11일 결의에 이어 인천시에서도 -

-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인천광역시청렴사회민관협의회(공동의장 박남춘 인천시장, 황규철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 회장)(이하 인천지역민관협의회)에서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등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는 한편, 국회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조속한 입법을 위한 공동 결의안을 3월 26일 채택했다고 밝혔다.
- 올해 3월 11일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사회민관협의회(공동의장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신철영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에서 결의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의 필요성과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되는 시대적 과제란 사실을 공감하고, 인천지역민관협의회에서도 타·시도와 함께 공동 결의문을 채택했다.

※ 인천지역청렴사회민관협의회는 지방정부 등 3개, 공직유관단체 11개, 시민사회단체 등 9개 등 총 23개 기관·단체로 구성되어 있음.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 촉구 결의문의 내용은 ▲국회는 정무위에서 법안심사 중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요청하고, ▲국민권익위원회는 동 법안의 법 시행에 대비하여 이해충돌방지제도에 대한 교육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준비하는 한편, ▲동 법안의 적용대상 기관은 자체적인 이해충돌 방지 노력 및 법안 주요 내용을 숙지하여 차질 없는 운영을 준비하는 것이다.
- 박남춘 인천지역민관협의회 공동의장은 “LH 직원의 광명·시흥 등 신도시 투기의혹과 관련해 국민의 분노와 질책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이와 같은 부동산 부패청산을 위해 인천지역민관협의회에서도 공동 결의안을 채택하였고, 「이해충돌 방지법」의 입법을 위해 인천에서는 적극적인 협조를 다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

<붙임> 인천광역시청렴사회민관협의회 결의안

인 천 광 역 시 청 립 사 회 민 관 협 의 회 결 의 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 촉구

인천광역시청립사회민관협의회는 사회적 문제로 드러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등 일부 공직자의 부동산 사전 투기 의혹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늦은 감은 있으나 국회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 처리 의지를 적극 환영하면서, 이 법의 조속한 제정과 후속조치 마련을 촉구한다.

1. 국회는 현재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을 조속히 심의하여 해당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요청한다.
2. 국민권익위원회는 동 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고, 법 시행에 대비하여 이해충돌방지제도에 대한 교육·홍보 등 후속조치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한다.
3. 동 법안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기관은 자체적인 이해충돌 방지 노력을 계속하는 한편, 법안 주요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여 시행 즉시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한다.

2021년 4월 1일

인 천 광 역 시 청 립 사 회 민 관 협 의 회